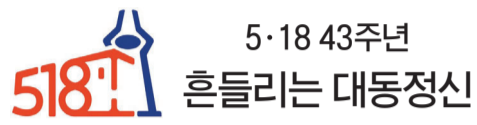


5·18은 오월단체 아닌 국민의 것... 갈등 넘어 화합을

부상자회·공로자회, 5·18 계엄군 특전사동지회와 '화해 선언' 강행
광주·전남 196개 시민단체 '대책위' 발족 43주년 행사에 두 단체 배제
유족회는 민주묘지 측과 갈등 ... 오월단체 스스로가 신뢰 약화 시켜



<1> 오월단체 갈등과 분열

민주화운동의 세계적 모델인 5·18민주화운동은 오월정신이자 숭고한 대동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5·18 43주년을 맞는 올해 광주에서는 공법단체로 거듭난 5월 단체들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불의에 맞서고 핍박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연대하고 공감한다'는 대동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5월 단체는 자신들의 역할을 '명예'가 아닌 '명예'이며, '채권'도 '어권'도 아닌 '채무'이고, '희생'이자 '봉사'라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당사자주'를 내세워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

'민주·인권·평화'의 오월정신은 5월 단체만의 것이 아닌 피로 일구낸 민주화 세력의 보편적 가치이다. 광주일보에는 4차례에 걸쳐 '흔들리는 대동정신'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통해, 5월단체 분열의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5월 대동정신의 복원을 모색한다.

지난해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공로자회 등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출범했으나, 이들은 '대동정신'으로 광주시민과 화합하기가 민사화단체와 반목을 일삼으면서 갈등과 분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갈등은 지난 2월 19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계엄군으로 구성된 (사)특전사동지회 손을 잡고 '용서와 화해의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연 이후 들불처럼 번졌다.

두 공법단체는 43년간 양측 관계였던 계엄군 가해자와 5·18 피해 당사자들이 화해를 하고 진상규명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 시민사회는 두 공법단체가 5·18 가해자인 계엄군을 피해자로 평가한데다 특전사 측에서 사과

나 진실규명 협력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결국 광주·전남지역 196개 시민단체가 모여 '오월정신지킴이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하고, 두 공법단체와 갈라서기에 이르렀다. 대책위에 소속된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제43주년 5·18기념행사에서 두 공법단체를 제명하기도 했다.

이들 두 공법단체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5·18행사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해체할 것을 촉구하면서 때아닌 '적통 논쟁'까지 일으켰다. 5·18유공자법상 5·18 단체나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목적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활동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와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조사위가 지난 3년여 동안 내놓은 실적이 없다"며 지난 달 24일 '5·18피해 자제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나섰다. 이에 반발하는 단체들에게 "특전사 동지회를 핑계로 5·18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단체가 바로 5·18을 왜곡하는 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공법단체인 5·18유족회는 국립5·18민주묘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유족회는 최근 김범태 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이 묘지 내 부속건물인 '민주관'으로 소장실을 옮기자 "민주관은 유족들을 위한 쉼터"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유족회는 최근 민주관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민주관 1층 전시실에 전시된 5·18 관련 사진물을 일방적으로 떼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5·18민주묘지 관리소는 소장실을 옮길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관리소는 "민주관은 신축 당시부터 유가족뿐 아니라 참배객까지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이었다"며 "민주관의 실제 소유자는 유족이 아닌 국가보훈처로, 국가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5·18 단체 간 갈등은 지난 43년간 꾸준했다.

지난 2021년에는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내에서 문흥식 전 회장을 해임하고 새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전이 잇따랐다. 앞서 지난 2009년에는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부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청 별관 건물 철거에 찬성하는 (사)구속부상자회와 철거에 반대하는 5·18유족회·부상자회 간 갈등이 터져나왔다. 지난 2000년에는 5·18사단법인 3단



영국 테이트 미술관 관계자들 광주비엔날레 방문 세계적 예술기관인 영국 테이트 미술관 관계자들이 9일 제 14회 광주비엔날레 본전시장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아 이숙경 예술감독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를 감상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마리아 발소 테이트 미술관 관장을 비롯해 미술관 이사진, 후원회 회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10일에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기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의 또 다른 전시관인 호랑가시나무아트플리온, 무각사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시민단체가 행사 기조, 보조금 지원 등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결국 무대를 각기 따로 설치해 전야제를 치르기도 했다.

최근 이어지는 5·18단체 간 분열도 과거와 똑같이 5·18 단체 스스로 대외적인 신뢰도와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18 왜곡 등 문제가 터져나와도 각 단체가 한 목소리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7일 광주에서 '5·18 북한군 침투설' 등 왜곡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5·18 단체들이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 5·18유족회가 '따라따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장에 적힌 혐의점도 각기 달랐다. 5·18기념재단은 9일까지도 법률 검토를 하느라 고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 박민식 現처장 지명

보훈부, 이르면 내달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박민식(58) 국가보훈처장을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부산 출신의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약 1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됐다. 박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장

관으로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보훈부도 이르면 6월 초 출범하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보훈 문화가 곧 국격"이라며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을 공약했으며, 임기 초반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해 이를 이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프랑스 대학생 5·18 다큐 제작 세계에 알려 ▶6면

분비가 준 휴식, KIA에 득필가 득필가 ▶18면

위기의 전남 산단 변화가 필요하다 ▶22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라남도 JeollaNam-do
제62회 The 62nd JeollaNam-do Sports Festival
전라남도체육대회
2023. 5. 12(금) ▶ 5. 15(월) (4일간)
완도군 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주관】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완도군

전라남도 JeollaNam-do
제31회 The 31st JeollaNam-do Sports Festival For The Disabled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2023. 5. 24(수) ▶ 5. 26(금) (3일간)
완도군 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주최 | JNSAO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